종 합 광주매일신문 (제8854호) 2025년 1월 23일 목요일

+

'청춘 빛포차 광장' 개방…'대·자·보 도시' 첫걸음

市. 기존 광주공원 주차장→'열린광장'으로 조성 희경루·지맵·양림동 등 연계 문화·먹거리 공존 '불법 포차' 활성화에 예산·행정력 낭비 지적도

광주시가 '청춘 빛포차 광장'을 조성, 전면 개방했다.

광주시는 22일 남구 광주공원 주차장

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과 임택 동 구청장, 차없는거리 주민, 상인회 대표, 대·자·보시민실천단등이참석했다.

'청춘 빛포차 광장'은 자동차로 단절 된 도시공간을 연결해 걷고 싶은 도시,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·자· 보도시의 실현 방안 중하나다.

광주공원, 희경루, 광주미디어아트플 랫폼(GMAP) 등 주변 문화 자원과 함 께 양림동·동명동·서남동 등 원도심과 연결해 '걷고, 모이고, 머무는' 역사와

문화가 함께하는 시민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.

광주시는 빛포차 광장을 통해 기후환 에서 '청춘 빛포차 광장' 개방 행사를 진 경 편익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대·자·보도시 효과를 검 증,시민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.

> 또 보행자 중심의 도로공간 재구조화 를 위해 '청춘 빛포차 거리'를 시작으로 '대각선 횡단보도' 확대, '차 없는 문화 전당길'운영도추진한다.

> 광주시는 지난해 6월 '대·자·보 도시 광주'를 선언하고 교통정책 방향을 기 존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·자전거·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.

대·자·보 도시는 광주G-패스를 시작



22일 오후 남구 구동 광주공원 앞에서 열린 '청춘 빛포차 광장' 개방 행사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/김애리 기자

으로 청춘 빛포차 광장, 광천권역 교통 대책 등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. 이어 2 026년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과 함

께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. 여기에 레저를 넘어선 자전거 일상화 를 위해 '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자

전거 전용도로', '광주천 자전거도로', '첨단지구 일대 전국 최초 자전거 생활 권 시범지구'를 조성한다.

광주시는 '청춘 빛포차 광장' 개방 행 사에 앞서 '지역과 경제를 살리는 차 없 는 거리 확산 간담회'를 개최했다.

간담회에는 광주 10여곳에서 시행한 '차 없는 거리' 경제 효과와 성과를 공유 하고 대·자·보도시 전환의 환경적 효과, 차 없는 거리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.

강기정시장은 "온실가스감축 등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자동차로 단절된 도로 를 연결해 대중교통, 자전거, 보행 중심의 대·자·보도시를실현하는 것은어렵지만 반드시기야할길"이라고강조했다.

하지만 일각에서는 '청춘 빛포차 광 장'에 대해 광주시가 불법 포장마차 거 리를 예산·행정력을 투입해 활성화하 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.

광주시는 청춘 빛포차 광장 조성과 함께 장기적으로 불법 포장마차 양성화 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상인들은 생계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당장 합법화는 어 렵다는 입장이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 고있다. /변은진 기자

행정체제 개편안 권고…광주·전남도 통합 고려 대상

행안부 민간자문위 제시 "광역시·도 통합 수도권 집중 극복"

수도권 집중 완화와 인구구조 변화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 권의 광역시·도 간에 통합이 권고됐다.

통합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광역시. 도에는 그간 통합 움직임을 이어온 부 산·울산·경남과 대구·경북, 광주·전남, 대전·충남 등이 제안됐다.

행정안전부가 민간 전문가로 꾸린 '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 회'(이하 미래위)는 22일 이 같은 내용 을 담은 '지방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'을 발표했다.

미래위는 8가지 개편 방안을 제안하며

터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지정받았다.

이는 전남도가 지난해 신규 사업으 로 발굴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 첫번째로광역시·도간통합을제시했다. 대상 지역으로는 현재 시·도간 통합 이 추진돼온 대구·경북과 부산·울산·경

미래위는 광역시·도 통합 이후에는 초광역권 행정 효율을 위해 '광역-기 초'로 된 2계층의 자치계층을 유지하고 권한 이양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

남, 대전·충남, 광주·전남 등을 꼽았다.

인구가 급감한 시·군·구 간 통합도 개편 방안으로 제시했다.

주문했다.

순천성가롤로병원,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

순천성가를로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 되도록 사업 필요성과 지역 의료 불균

7억5천만원 투입…24시간 전문의 상주·집중 치료시설

미래위는 인구감소 시·군 통합과 초 광역권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 조

형 논리를 개발, 적극 대응한 결과다.

심뇌혈관질환은 도내 사망 원인 중 2

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질환으로 발병 후

성형 통합, 자치구 적정 규모를 유지하 기 위한 자치구 간 통합이 향후 시·군· 구 통합을 위해 검토할 만한 주요 유형 으로 제시했다.

특·광역시와 인접한 시·군 간 행정구 역을 변경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담겼다.

미래위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지역과 편입 시 발전 가 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 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.

이는 2023년 '메가시티' 논란을 낳았 던 '김포의 서울시 편입' 문제 등 대도 시 인접 시·군의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.

이 밖에 권고안에는 특례시가 권역 다.

신속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. 이번 지정

으로 전남 동부권 도민의 심뇌혈관질환

순천성가롤로병원 지역심뇌혈관질

환센터는 3년간 총사업비 7억5천만원

을 투입해 심뇌혈관 중환자실, 신경계

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기능을 수행하 는 '비수도권 거점 대도시' 확대, 지자 체가 필요한 권한과 기능을 맞춤형으 로 부여하는 지자체 기능 조정 방안, 특 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가 포함됐다.

미래위는 광역-기초로 이어지는 2단 계 자치계층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 다면서도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해 자 치구의 일반구 전환, 인구과소 시·군의 행정시·군 전환 등을 장기 과제로 검토 할 것을 제안했다.

행안부는 미래위 권고안을 추진할 지원단을 설치해 적극적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 /연합뉴스

중환자실, 뇌졸중 집중치료실 등 시설

을 갖출 예정이다.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며 심뇌혈관 질환자 365일 응급 시술·수술, 퇴원환 자 예방 관리교육 등을 담당한다. 권역

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 해 필요 시 신속한 이송으로 치료・전원 을 아우르는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. /양시원기자

전남도, 상반기 8천555억 조기집행

공사·용역·물품 1조1천757억 발주계획 공개

전남도는 22일 "계약업무의 투명성 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조원 규모의 2025년 공사·용역·물품 사업 발주계획 을 도 누리집(회계과 자료실)과 조달 청(나라장터)에 공개했다"고 밝혔다.

전남도 발주 예정 사업 규모는 공사 9 천945억원, 용역 1천507억원, 물품 305 억원으로 총 941건 1조1천757억원이다. 이는 지난해 9천130억원보다 2천627억 원증가한 규모다.

주요 사업은 구암천 등 하천재해예 방 19건 5천244억원, 함평엄다천지구 등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건 762억 원, 광양청 세풍산단 조성 1천144억원 등이다.

전남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 해 발주하는 사업의 73%인 8천555억원 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.

22개 시·군의 사업 발주 규모는 지난 해(3조44억원)보다 2천427억원 증가한 1만1천964건, 3조2천471억원이다.

종 입찰 시 지역제한제도를 우선 적용 하고 공사 입찰 시 지역업체 49% 이상 을 공동도급토록 하는 한편, 공사 하도

급 시 지역업체가 70% 이상 참여하도 록 하고 있다. 또한 물품 구매 시 전남 생산업체 우선 구매와 적격심사 시 지 역 업체 참여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 고있다. /김재정기자

道, 기본형 공익직불금 내달부터 접수

전남도가 오는 2월1일부터 2025년 기본 형공익직불금비대면 접수를시작한다.

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· 농업법인에 직불금 을 지급하는 제도다.

스마트폰 등 비대면 접수는 2월 한 달 간 이뤄진다.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은 3월4일부터 4 월30일까지 읍·면·동 사무소에 신청하 면 된다.

소농 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이 0.5 전남도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각 ha 이하로 농촌 거주와 영농종사가 3년 이상 등 추가적으로 소규모 요건에 맞 는 농가에 연간 130만원을 지급한다.

/양시원기자



+